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기업이 찾는 고양 실리콘밸리 설계 서울 못지 않은 자족도시 만들 것”

고양시가 새로운 민선 8기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공학박사로서 도시전문가인 이동환 시대를 새롭게 출범하여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크나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새로운 시기에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을 만나 그의 비전과 앞으로 그가 펼쳐 나갈 4년 간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요 약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석사 ·연세대·홍익대 겸임교수
·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국토정책위 팀장

**일산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구상
통일로 확장 등 교통망 개선 추진
“완벽한 도시 목표... 4년은 짧아”**

-오랜 시간 고양시장직에 도전해오셨다. 당선 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다. 이정도면 일산신도시 토박이라고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만큼 잘 알고 제일 사랑하는 도시를 제가 그려온 대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니 당선됐을 때 무척 기뻐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5년부터 선거를 준비했고, 2006년에 처음 공천신청을 한 이후로 거의 17년 만에 당선이 됐다. 하지만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의 삶이 제 어깨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제가 도시전문가로서 그려왔던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4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안에 밀그림을 그리고 착공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민선8기의 역점 사업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고양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고양특례시가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서울 못지않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바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융복합·AI·로봇·반도체관련 첨단 산업기업 1,000개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

리콘밸리를 실현해 내고자 한다. 고양경제자유구역 포함지역으로는 기존 확정된 인프라 외에 JDS, 대곡역세권 지역 등을 생각 중이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윤곽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과 함께 잡아나갈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교수, 연구원 등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서울, 인천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얼마아마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과주, 의정부, 양주 등 인접 도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생각하면, 경기도의 발전은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된다 고도 할 수 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정받아 진정한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

-교통정책 해소를 위해 교통망 개선 사업도 많이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검토 중에 있다. 저는 지하고속도로를 자유로 킨텍스IC까지 연결해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구상 중이다. 자유로-강변북로지하화는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 남단~시흥대교) 지하고속도로처럼 지하 40m 이상 대심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다.

또한 덕양구 내유동과 관산동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간 주요간선도로인 통일로 확장을 통해 통행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일로 확장이 근본적인 대안이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경기북부 대규모 개발사업 조성에 따라 통일로 이용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선 관산동, 내유동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교통 소통은 전보다 개선됐다. 또한 일부 정체구간 차로를 확장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해 통행이 다소 원활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로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 시설규모 등을 검토하고, 통행 개선이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벌써 일산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되었다. 신도시, 구도심 모두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일산신도시가 생겨난 지도 벌써 30년이 되어서 재개발·재건축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은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직속 도시정비기구를 구상 중이다. 현재 일산의 평균용적률은 5개 1기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다. 3종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우리가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최대 300%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 조례만 개정한다면 300%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능한 내에서 최대 용적률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양특례시를 앞으로 ‘지렛대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불필요한 힘은 빼고 효

율은 높여주는 도구다. 인구 108만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만한 조직과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조직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정책, 관행적 예산도 처음부터 모두 다시 검토하겠다. 또한 시민들이 시정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소통기구’라는 공유플랫폼을 도입해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속통(通)행정을 실현하려고 한다. 시정은 시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만큼 답답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속이 통하는 행정으로 시민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뽕 뚫어 드리고자 한다. 피상적인 공감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시정에 입하는 시장이 되겠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26일 원 장관 면담에서 지자체 차원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단축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조정 및 공업지역 물량 배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등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